

유승화 부회장 기고

문화일보

2009년 03월 04일 수요일 038면 오피니언



기고

유승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SOC 예산 증가의 아이러니

■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SOC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5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무려 26%가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에 마치 큰 수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물론 수치로만 보면 건설업계가 꽤 많은 이익을 챙기거나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SOC 예산이 늘었으니 공사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익까지 많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설사들은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공사 예산 10% 절감 정책과 실적 공사비 적용 등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이 과거에 비해 15% 이상 삭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지적돼 왔던 품셈의 거품이 제거되고 또한 실적 공사비 확대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은 이미 건설사의 실행가격에 근접해 있는데도 공사비를 삭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하면서 20~30%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 공사를 70%에 수주할 경우 실제 수주금액은 예전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겠지만 건설사는 이익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는 공공공사 수주가 '성배(聖杯)' 아닌 '독배(毒杯)'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다시 말해 공사 수주가 '승자의 저주'가 되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그렇다면 이익도 나지 않는 공사를 왜 수주하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한껏 치세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고 또 가족 같은 종업원들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주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일부 건설사들은 전략적으로 저가 수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적을 쌓아야 다음번 유사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도 여의치 않다. 건설 경기가 정상적인 궤도에 있을 때는 경쟁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적정 이윤이 가능한 민간 부문에서 얻은 수익으로 저가 수주한 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포트폴리오 경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공공공사에서 확보한 수익으로 적자를 보는 다른 공공공사를 커버해 제로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공공부문은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설사는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기업의 단명을 초래하고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특히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그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사례가 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으로 책정된 공사원가가 법정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 시공업체가 속출함에 따라 적정이윤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나아가 조달청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발주 기관들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SOC 시설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예산 절감을 빌미로 공사비를 삭감하기보다는 '제값을 주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기 때문이다.